

##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인권식탁」 효과성 검증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Evaluating the Effects of a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 "The Table of Human Rights" for Improving the Human Rights Sensitivity of Employees at Mental Health Facilities

장성진<sup>1)</sup>, 오현아<sup>1)</sup>, 손기화<sup>1)</sup>, 조성준<sup>1,2,\*)</sup>

S.J. Jang MSW, H.A. Oh MSW, K.W. Son MSW, S.J. Cho MD, Ph.D

#### 초록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인권식탁」이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의 인권에 대한 이해 및 인권 옹호적 가치와 태도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연구방법** : 2018년 3월, 4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한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에 참여한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78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프로그램 「인권식탁」을 실시하였다. 먼저, 인권에 대한 이해 및 인권 옹호적 가치와 태도변화를 보고자 국가인권위원회(2008년)에서 개발한 인권교육 평가도구(정신장애인분야 간편형)를 교육 전후 동일하게 실시하고 spss 24.0을 통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교육의 성취도, 키워드 등 보다 다양한 효과성평가를 위해 교육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키워드는 의미연결망분석으로 효과성을 확인하였다.
- **연구결과** : 인권교육 프로그램 「인권식탁」 실시 전후를 비교한 결과, 인권에 대한 이해 및 인권 옹호적 가치와 태도변화는 사전대비 0.37점 향상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에 대한 성취도 평균은 4.39점/5점으로 나타났고, 연구 참여자들이 제시한 교육의 핵심키워드는 '이해', '기본권', '인권식탁'의 순으로 나타났다.
- **결론** : 인권교육 프로그램 「인권식탁」은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의 인권에 대한 이해 및 인권 옹호적 가치와 태도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주요용어** :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인권에 대한 이해, 인권 옹호적 가치와 태도, 인권감수성, 인권식탁, 의미연결망 분석

#### Abstract

- **Objective** : The study aims to examine how the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 "The Table of Human Rights," for improving the human rights sensitivity of employees at mental health facilities affects their understanding of human rights, changes in their values and attitude on the human rights advocacy.
- **Methods** : In March 2018, a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 "The Table of Human Rights," was held for 78 persons in psychiatric rehabilitation facilities who participated in human rights training for employees at mental health facilities operated by the Seoul Mental Health Welfare Center in April, 2018. First of all, we used the human rights education evaluation tool (Mental disorder person-simple type) develop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008) in order to observe changes in understanding human rights, their value and attitude on human rights advocacy before and after the education took place. After that, a paired sample t-test was performed in SPSS 24.0.
- **Results** : As a result of the comparison between before the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 "The Table of Human Rights", and afterwards, the understanding of human rights, as well as the values and attitude on human rights advocacy were improved by 0.37 points. Thus, thi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average level of educational achievement was 4.39/5 points. The keywords of education suggested by the researchers were the 'understanding', 'fundamental rights', and 'the table of human rights' in order.
- **Conclusion** : The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 "The Table of Human Rights," was found to

1)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Seoul Mental Health Welfare Center)  
2)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Neuropsychiatry)  
) 교신저자 (Corresponding author) : E-mail (sjcho0812@hanmail.net)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changing the understanding of the human rights of employees at mental health facilities, specifically their values and attitude towards human rights advocacy. This suggests a positive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sensitivity of those who work at mental health facilities.

- **Keyword** : Human rights education for employees at mental health promotion facilities, understanding of human rights, values and attitudes on human rights, human rights sensitivity, the table of human rights, semantic network analysis

## I. 서론

인권(Human Rights, 人權)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요구하고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로 보편성(universality), 불가분성(indivisibility), 도덕성(morality), 우선성(priority)이라는 본질적 특성을 가진다(이정아 외, 2015). 그러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상대적으로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이주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인권의 본질적 특성이 제대로 보장되거나 충분히 경험되는 기회가 적었다. 이에 유엔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시작으로 1990년대 초반까지 다양한 분야의 인권조약을 제정하는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이 과정에서 인권교육은 인권규범의 국내적 실현에 중요한 도구로 인식되었다(이성훈, 2010).

우리나라에서도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보장받기 위한 많은 제도가 마련되어 왔다. 특히 정신장애와 관련해서는 1997년 정신보건법 제정 후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이 수립되었고, 2008년 정신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의 인권교육을 의무화하였다. 인권교육을 운영할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인권교육 강사양성을 통해 체계를 만들고 정신건강증진시설 설치·운영자와 종사자의 인권의식향상으로 현장에서 만나는 정신질환자들에게 보다 인권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2014)에 따르면,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처음 의무화 한 2009년에는 75.3%의 참여율을 보였으나 2013년에는 67.8%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보고하였고 참여율 감소의 주요인으로 반복되는 인권교육에 대한 흥미저하를 꼽았다. 또한 제도화된 인권교육의 내용과 기준은 기본적인 수준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의무인권교육의 방법과 운영에 대한 보완대책,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인권관련 주제선정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한계점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하유정(2013)은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들이 정신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은 높지만 실제 인권을 보장하는 실천에서는 낮게 나타나기도 하고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를 목격함에도 인권침해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강석권(2013)은 피진정인 대상 강의식 인권교육이 인권 피해자적 관점에서 그들을 잠재적 가해자와 인권보호 및 향상의 객체로 전제하면서 교화식 교육으로 흘러 인권을 통한 교육이 되지 못하고 그들의 존중감을 침해하여 인권교육에 대한 거부감을 표출한다고 보고하였다.

인권교육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고, 차별과 차이를 구분하고, 나의 권리와 남의 권리를 똑같이 존중하는 태도를 배우고, 인권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02). 그러나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의 궁극적 목적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적 서비스 제공'이다 보니 많은 인권교육이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및 침해 현황,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전략, 환자의 사생활 자유, 격리강박 등 정신질환자를 만나는 상황에서의 인권으로만 다뤄지기 쉽고 특정 대상에 국한된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폭넓은 가치, 태도, 실천역량을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인권교육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적 서비스 제공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갖고 있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종사자 각자가 자신의 권리를 알고 행사하며 그를 기반으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상호가 인권친화적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향하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09년 인권교육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서울지역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연1회(4시간)의 제한된 교육시간, 의무교육에 따른 참석자의 동기저하 등의 한계를 보완하고 정신질환자를 만나는 현장에 국한되는 인권이 아닌 일상에서 인권친화적 행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방안을 고민하였다. 이에, 일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인권감수성 향상을 도모하는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를 위한 인권워크북 「인권식탁」을 2017년에 개발하였고, 이를 모티브로 기본권을 주제로 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인권식탁」을 구성하여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인권교육과 워크북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그 효과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주제 및 워크북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권교육 프로그램 「인권식탁」이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의 인권에 대한 이해 및 인권 옹호적 가치와 태도변화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인권식탁」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의 다양한 커리큘럼 개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인권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종사자의 인권감수성을 향상하며 인권문화 증진 및 인권침해 감소를 통한 정신장애인 보호를 위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 제70조에서는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재활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의 장과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의무, 인권교육을 운영하기 위한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등을 명시하고 있다. 동법 시행규칙 제50조에서는 인권교육의 내용과 시간,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위 법령에 근거하여 2009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지역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운영하고 있다.